

‘전주국제영화제’ 막바지 준비 착착

30일~5월 9일 영화의거리 등 전주시 일원서 개최...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공간 조성 최선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손님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펼쳐지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관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당장 시는 영화제 기간 중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전주시 일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안전 점검 △불법주점차 단속 △영화의 거리 정비 △청소대책 △불법광고물 정비 등 안전·교통·청소·미관 등 각 분야별 집중점검에 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영화제가 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달 '당신의 봄을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선발된 전주국제영화제의 자원활동가(지프지기) 420여 명도 관객의 영화 관람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원활동가들은 각자의 장점과 기량을 고려해 △한국영화팀 △해외영화팀 △홍보미디어팀 △전주프로젝트팀 △마케팅팀 △관광객서비스팀 △디자이너팀 △씨네투어팀 △기술팀 △운영팀 △초청팀 △기획운영실 등 12개 팀 24개 파트로 나뉘어 성공적인 영화제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 활약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고, 폐막식은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 공모에 1835편, 국제경쟁부문 공모에 86개국 662편이 출품돼 2년 연속 한국영화 최다 출품 기록을 경신하는 등 개최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으며, 열흘간 57개국 224편의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라두 주데 감독의 <컨타넨탈 25>, 폐막작은 김옥영 감독의 <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계의 나라에서'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또 2025 전주세계문화주간-호주문화주간을 맞아 '또 다른 호주 영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라는 주제로 선정한 7편의 호주 영화가 소개되고, 전주국제영화제-벤쿠버국제영화제 교류 프로그램인 '캐나다 퍼커스'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가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가치불영영화제와 협업으로 가치불영영화에 대한 관객상 신설,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3개 메이저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독립영화 지원을 위한 '전주 캐스트' 론칭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도 이어진다. 영화제 대표 부대행사로 자리 잡은 '골목상영'은 영화의거리 일대와 풍남문, 한벽타널, 전주부채문화관, 영화정 도서관, 예코시티광장, 서학 예술마을 열린마당 등 상영 장소를 11곳으로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생활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곳곳에서 특별한 야경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야와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전주씨네투어X산책'이 영화제 기간 중 전라감영에 행사장을 조성해 영화상영과 함께 대규모 '조선팝 공연'도 함께 신명나게 영화축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들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람객과 시민들이 찾아주셔서 봄날의 영화축제를 함께 즐기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통한지 명맥 이을 후계자 모집

전주시·전주문화재단, 후계자 양성 사업 추진

전주시가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갈 후계자를 지원해 한지장인으로 키우기로 했다. 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전통한지 제조기술을 계승하고 한지문화를 보존하는데 뜻을 함께할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통한지 장인대학 교육생 과정은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전통한지 장인 교육은 한지 전문가와 전주 한지장 등에 의해 이론과 실기 등으로 이뤄지며, 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교육 세부 내용을 입문·기초·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해 각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으로 선정된 지원자들은 교육훈련 기간 △전주시 생활임금



수준의 교육훈련비 △각 과정별 통과자들에게 지급되는 장려 수당 △국내·외 한지 관련 대학·기관·기업 탐방 기회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5월 28일 오후 4시까지 전통한지 장인대학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전략 제시

전주시정연구원, 'JJRI 정책브리프 제8호'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금융분야별 특성에 기반한 전주 금융중심지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8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금융분야별 특성과 전주시 금융중심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번 정책브리프에서 금융기관들의 적합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금융분야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자산운용 분야의 차별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전주시 역량 평가와 결합해 전주시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전주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에 대해 입지역량의 비교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주는 수요 기반과 산업 인프라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지만 환경과 생활 인프라는 양호하게 나타나 자산운용이 가장 적합한 금융분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산운용 중심과 신기술 융복합 금융 등에 특화된 전주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했으며, △금융기관 전주 입지 및 집적을 위한 전략 △전주시 지역발전과 연계 전략 등 전략 등을 함께 제안했다. /권희성 기자

우아2동 문화생태환경보전회, 영남 산불 피해복구기금 기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문화생태환경보전회(위원장 오남석)는 우아2동주민센터(동장 민용기)를 방문해 '제1회 주민과 함께하는 아중천 벚꽃 나들이' 행사 수익금 100만원을 '영남 대청산불 피해복구기금'으로 기부했다. 오남석 문화생태환경보전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봄나들이를 넘어,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즐기며 나눔까지 실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과 자연,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혁신의료기기 중심지 도약 '머리 맞대'

허브 도시 육성 위한 세미나 열려

전주시가 혁신의료기기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와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는 17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혁신의료기기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혁신의료기기 허브 도시와 관련해 실증센터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혁신적인 정형외과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인 정석 고려대학교 교수와 정화철 시지메드텍 이사가 실증센터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등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정석 교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비임상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실증센터가 비임상시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화철 이사는 "혁신의료기기 비임상 평가 과정에서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기업들의 복잡한 욕구를 평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실증센터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실증센터가 의료기기 기업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문을 연 메카노바

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는 국내 유일의 3.4등급 의료기기를 타깃으로 하는 비임상(GLP) 시설로, 품 안에 매식되는 의료기기의 독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혁신의료기기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프라이다. 센터에서는 첨단 의료기기 기술의 실증과 연구개발을 지원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신뢰성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상용화 과정에서 비임상시험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필수 단계로, 비임상시험을 통과해야만 국내의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어 실증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 대표 발의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사직)이 대표발의해 35명의 동의로 상정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려

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 인정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의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국무총리실, 국회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정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